

등록금 동결, 예산은 국립대로… 사립대, 신입생 모집 ‘비상’

교육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지역대학 학생 전액 장학금 검토

사립대, 규제에 재원 확충 어려워
형평성·지역대학 경쟁 기반 훼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사립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규제에 더해 정부 재정지원이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신입생 모집 경쟁까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른바 ‘3중 압박’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40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 소요 예산은 내년 1000억원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대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등록금 규제다. 등록금은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 기조가 이어졌고,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인상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등록금 인상 한도도 최근 3년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졌다.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지만, 사립대들은 그동안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연계 등을 의식해 실제 등록금 인상에는 제약이 컸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II유형과 등록금 동결 연계를 폐지할 방침이지만, 사립대들은 장기간 누적된 재정 부담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정부 재정지원이다. 사립대가 체감하는 재정지원 격차는 최근 정부의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사립대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5극 3특’ 연계 지방대 육성, 브랜드 단과 대학, AI 거점대학, 특성화 지방대학 사업 등 주요 고등교육 정책이 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거점국립대는 특성화 지방대학 사업을 통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사립대들은 여기에 지역 균형 장학금까지 국립대 중심으로 설계되면 재정지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사립대는 등록금 규제로 자체 재원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까지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국·사립대 간 교육 여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까지 사실상 ‘0원’이 되면 입시 경쟁에서도 사립대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금 부담이 사라질 경우 수험생들의 국립

대 선호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지역 사립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지역 균형 장학금을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 국립대에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학생 간 형평성과 지역대학의 경쟁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사무총장은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까지 시행되면 학생 모집 경쟁에서도 사립대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며 “지역 균형 장학금은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니라 지역과 학생을 기준으로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립대의 AI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국국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정책을 환영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2031년까지 주택 8.7만호 순증”

서계·청파동 일대, 모아타운 등
현재 민간정비사업 7곳 추진 중
임대주택도 4.8만호 확보 예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기존 주택의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서울 전역에서 약 8만7000호의 주택이 순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을 서울의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은 제외한 6곳의 주택은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1695세대, 약 26.5%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주택 6393세대를 모두 멸실 물량으로 계산한 순증 규모다. 청파3구역의 계획 세대수가 확정되면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택뿐 아니라 도로와 공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생활SOC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서계·청파동은 서울역과 가깝지만 좁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1일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골목과 가파른 구릉지,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장기간 지연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세대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은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기존 172세대를 499세대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계·청파동 일대를 돌아본 뒤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주민 및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성 개선과 인허

가 기간 단축,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서울시는 서계·청파동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 약 2만호 늘었다. 재개발은 약 7000호인 27.4%, 재건축은 약 1만3000호인 44.2%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 멸실을 반영해도 약 8만7000호, 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000호 확보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사천시-하동군, 사천공항 확장 등 뜻 모아

국토부에 공동건의문 발표

사천시와 하동군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7차(2026~2030)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확장과 CIQ 시설 설치를 반영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10일 발표했다.

두 지자체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사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해안 국제관광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동식 사천시장과 김현수 하동군수는 10일 오후 3시 사천시청 시장실에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비전 공유, 남해안 관광 개발과 하동군 관광 비전 공유, 사천공항 확장·CIQ 시설 설치 필요성 설명 순으로 행사를 진행한 뒤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사천은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

업(KAI)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의 중심축이다.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임시 청사 체제로 공식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으로, 2030년까지 우주항공국가산단 내에 신청사를 건립해 3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천시와 하동군은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 연구 기관, 투자자의 방문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 인프라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CIQ 시설 설치 건의와 관련해 항공 MRO 산업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천공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옆에 있는 군 공항으로, 길이 2743m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연간 16만 5000회기량 운항하고 있으나 현재는 국내선만 다니고 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주시, 대일공업 국내복귀 투자 유치

506억 규모 車 제조공장 신설

경주시가 자동차부품 기업 대일공업(주)의 국내복귀 투자를 유치했다. 대일공업은 베트남 생산라인을 이전해 경주에 506억원 규모의 자동차 시트용 스티폼 프레임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경주시는 10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대일공업과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문상인 대일공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올해 경주시의 첫 국내복귀 투자유치 사례로, 대일공업은 내남면 명계3일반산업단지에 경주공장을 조성하고 5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경주공장에서는 제네시스 등 신규 차종에 적용되는 시트 프



주낙영 경주시장과 문상인 대일공업(주) 대표이사,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0일 경주시청에서 506억원 규모의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레이م 부품을 생산한다.

1987년 설립된 대일공업은 충남 천안에 본사를 두고 울산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신규 차종 양산과 생산물량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오산시, 베트남 다낭시와 교류 승계 협정

광남성 자매결연 이후 22년간 교류
행정·경제·문화 등 협력분야 확대

오산시가 베트남 다낭시와 기존 교류관계를 공식 승계하고 행정·경제·문화·교육·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해 오산시와 다

낭시 간 교류 승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낭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조용호 시장과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오산시·오산시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다낭시에서는 응우옌 티 아인 티 다낭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대표단을 맞이했다.

이번 협정은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교류 도시였던 광남성과 다낭시가 통합됨에 따라 오산시와 광남성 간 교류 관계를 다낭시가 공식 승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Meet Korea in Da Nang 2026’ 행사에서 교류 승계 협정을 체결하고 기존 우호 관계를 지속발전시키기로 했다.

오산시는 2004년 광남성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2년간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기존 국제교류의 기반을 다낭시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산(경기)=김대의 기자 dykimi@